인정과 오인:
사드 배치와 한중 간 인정투쟁*

손기영**

Ⅰ. 들어가며
Ⅱ. 국제정치학과 인정의 문제
Ⅲ. 인정이론과 라캉의 오인
Ⅳ.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인정과 오인
Ⅴ. 마치며

주제어: 인정투쟁, 오인, 사드, 중국, 국가정체성

| 국문초록 |

국제관계학의 주류이론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국가를 주권을 가진 법적·이성적 행위자로 취급한다. 본고는 국제관계학의 주류 이론이 아닌 심리/인지적 접근법을 통해 국가는 상호간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주체성을 보유한 행위자이고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투쟁하는 욕망의 소유자로 분류한다. 본고는 헤겔과 호네트의 인정이론을 통해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의 양상으로 진행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의 긴장과 마찰을 분석하고, 라캉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오인(misrecognition)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욕망이 충족되지 못해 병리적 증상을 보이는 행위자로서 국가의 행동양태를 설명한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국의 안보이익에 반하며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군사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자해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취해 한중관계의 기본 틀을 훼손했다. 반면 한국은 사드 배치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불가피한 자위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대응책을 강구했지만 결국 중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함으로써 사태를 봉합했다. 본고는 양국이 서로에 대해 오인된 주체성과 병리적 불완전성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상대의 안보 논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국제관계연구』 제22권 제2호 (2017년 겨울호).
http://dx.doi.org/10.18031/jip.2017.12.22.2.115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362-2008-1-A00001).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인문한국(HK) 교수.

I. 들어가며

본고는 국내외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 끝에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문제를 국가 간 인정과 오인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1992년 수교 이래 한중 양국은 괄목할 만한 교류와 협력을 이루었지만, 안보분야의 협력은 제한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한미 간과 북중 간에 존재하는 동맹조약 때문에 운신의 폭과 깊이가 제한적이더라도 북중 동맹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한중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된 상태에서 한국과 중국은 서로를 안보협력의 대상자로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 양국은 이미 2008년에 상호관계를 동맹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협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협력을 했어야 했지만 현실에서 안보협력은 국방장관회담, 직통전화개설 등 제한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1)]

사드 배치 문제는 심각한 안보 이슈이고 한중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이 사건 자체만으로는 왜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경제제재를 포함한 양국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2014년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에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힐 때부터 사드의 임시 배치가 완료된 시점인 2017년 9월 7일까지 3년 남짓한 시간 동안 한중 간에는 어떤 대화가 있었고 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을까? 위협의 변화에 따라 전력의 배치를 포함한 적절한 군사적 대응은 필요하지만, 위협과 대응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더 나아가 상대편을 어떤 정체성을 가진 타자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사태의 전개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중국의 대응 행위는 비교적 명료하게 설명될 수 있다. 즉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활용한 미국의 대중 견제, 북한 위협의 실질적 당사자이면서 한미동맹의 하위 파트너인 한국의 불가피한 사드 배치, 이에 따른 중국의 보복 행위로 보는 시각이 그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왜 힘의 균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전술핵의 도입보다는 상당한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는 사드

1)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 137.

배치에 광적으로 집착했을까? 중국은 왜 전략자산의 배치라는 문제에 합당한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인적·물적 교류를 막는 강도 높은 자해적 보복조치를 취했을까? 한국은 왜 한반도의 안보와 관련 중요한 행위자인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무시하고,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국가 내부적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을까? 한국전쟁의 향방에 미국과 중국이 거의 대등한 영향을 미치면서 분단으로 이어진 사실을 돌이켜 보면 한반도에 대해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전략적 이해관계는 한국 정부나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을 초월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친미적인 한국이나 한국의 미군기지와 바로 대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 북경으로부터 서울이 약 1,000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지정학적 인접성을 생각할 때, 한국에 배치되는 무기나 레이더는 중국의 세계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62년 쿠바 미사일위기에서 제3차 세계대전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대응하다가 결국 터키에 배치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를 철수시킨다는 거래를 통해 사태를 종결시킨 미국의 케네디 정부만큼이나 중국 정부가 사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언론은 이 사태를 쿠바 위기에 비유하기도 했다.[2)]

위협에 따른 새로운 전력의 배치는 면밀히 전략적 이익을 따져야 되지만, 위협과 대응에 대한 인식은 국가정체성의 인정 혹은 오인이라는 과정과 직결된다. 기존의 연구가 사드 배치에 따른 전략적 분석에 집중되었다면, 본고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각국의 대립을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과 호네트(Axel Honneth)의 인정이론과 라캉(Jacques Lacan)의 정신분석이론을 이용하여 진단하고, 불인정 혹은 오인 상태에서 시작되는 국가 간의 대립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 접근법을 찾아본다.[3)]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중관계를 인정과 오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사드 문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7년 10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을

2) *China Daily*, July 21, 2001.

3) Axel Honneth,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 (Cambridge, Mass.: MIT Press, 1996); *Jacques Lacan, Écrits: A Selection* (Routledge: London, 2001).

것이라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봉합되었다.[4] 하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사드의 완전한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은 '신(新)남방정책'을 포함한 외교 다변화의 노력을 가속화하면서 한중관계의 완전한 회복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II. 국제정치학과 인정의 문제

국가 간 인정의 문제는 흔히 수교조약과 같은 정치적·법률적 문제로 접근하지만 국가 간 인정의 실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정은 정책결정자들의 심리적 문제이면서도, 국가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많은 안보전문가들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정치적 혹은 국제법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없다. 인정은 핵무기라는 무력의 보유 여부 혹은 힘의 균형의 변화 등의 물질적 요소의 문제이면서, 한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 타국이 느끼는 심리적·인지적 요소로서 21세기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5]

정책결정자들의 심리/인지적 성향에 대한 연구는 국제관계학에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국제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류적 접근법으로 대두되지는 못했다.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의 균형론이나 세력전이론과 같은 신현실주의적 구조론이 국제관계학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론의 틀 속에서 세부적인 방법론으로 지식생산을 위한 과학적 사고를 추구하는 실증주의(positivism)의 지배적 영향력이 1980년대 말을 전후해서 도전을 받으면서, 규범론, 페미니즘, 비판이론, 역사사회학, 포스트모더니즘, 구성주의 등 다양한 탈실증주의(post-positivism)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6] 이러한

4) 『동아일보』, 2017년 11월 12일.

5) Thomas Lindemann and Erik Ringmar,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Recognition* (London: Routledge, 2014), p. 3.

6) John Baylis and Steve Smith,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p. 165-190; Steve Smith, Ken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국제관계를 구조적 시각에서 설명을 가능하게 했던 냉전이 종식되면서 21세기 각국의 외교정책은 국내적인 요인과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부서의 정책결정자의 선호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7)]

정책결정자의 심리/인지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을 통해 정책의 결과물이 단순히 합리적 사고의 결정체가 아닌 인간이나 인간집단이 가진 인식적 특성, 상호주관성, 정체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실이 분명해졌다.[8)] 이 분야의 명저인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의『국제정치에서의 인식와 오인(*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은 외교안보 정책결정에서 발생하는 인식적 문제에 대한 연구이다.[9)] 저비스는 안보 관련 정책결정자들이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을 평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호전적이라고 인지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들이 평소에 가진 신념이나 세계관에 의해 많은 사건들을 왜곡하여 인식한다고 주장한다.[10)] 비슷한 관점에서 홀스티(Ole R. Holsti)도 아이젠하워 정부의 국무장관을 지낸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의 경우 제한된 시간에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 평소의 정치적 신념이나 소련에 대한 고착화된 적대적 이미지 때문에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한다.[11)]

인정이라는 개념을 주권과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국민국가 단위의 국제체제에 적용할 때 국가에게 어느 정도의 인성(人性)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12)] 플라톤이 도시국가에 대해 인성을 부여한 이래 이러한 물화(reification) 과정에 대해

Booth and Marysia Zalewski (eds.), *International Theory: Positivism and Beyo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7) Christopher C. Hill, *The Changing Politics of Foreign Polic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p. 4.

8) 은용수, "심리/인지적 연구와 국제관계학,"『국제정치논총』 제53권 제4호 (2013), p. 102.

9)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10) Robert Jervis, "War and Misperceptio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 18, No. 4 (1988), pp. 675, 688.

11) Ole R. Holsti, "Cognitive Dynamics and Images of the Enem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1, No. 1 (1967), pp. 29-37.

12) Alexander Wendt, "The State as Person in International Theor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0, No. 2 (2004), pp. 289-316.

많은 학자들 간의 논의가 있지만, 개인들의 복합체인 국가에게 어느 정도 감정적, 혹은 인격적 요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13]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의 확립과 타자의 인정을 필요로 하듯이 국가도 국가정체성을 보유하면서 타국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국민국가체제에서는 모든 국가가 기본적으로 평등하다는 원칙이 지배적이지만, 인간사회와 같이 개별 국가가 실제로 평등할 수는 없고 개별 국가에 대한 인정의 다양성으로 인해 '차이의 정치(politics of difference)'가 발생한다.[14] 본고는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에서 주로 상정하는 국민국가들 간의 충돌과 협력이라는 모델보다는 심리/인지적 접근법을 이용해 인정, 불인정, 혹은 오인을 통한 국가 간 관계 및 정체성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의 연구흐름과 본고의 차별성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국제관계의 접근법은 특정 국가를 어떤 수준에서 인정할지의 여부를 국제법적으로 수교조약을 맺거나, 정책결정자가 개별 사안과 관련해 전략적으로 국익을 판단해서 친소관계를 형성하는 문제라고 보아왔다. 많은 분석가들은 사드 배치에 대해 미중 간 전략경쟁의 상황에서 한미일 3각 동맹을 형성하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하거나,[15] 이러한 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비판하면서 한미동맹의 강화를 주문하였다.[16]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행위를 미중 간의 전략적 균형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17] 이와 함께 미중 경쟁구도에서 한쪽으로 경도되지 않고 전략적 균형을 추구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18]

---

13) Richard Ned Lebow, *A Cultural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 116.

14) Charles Taylor,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A. Gutmann (ed.),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 38.

15) 김홍규, "4차 북한 핵실험과 사드의 국제정치,"『통일정책연구』제25권 제1호 (2016), pp. 25-58; 변창구, "제5장.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 전략과 사드(THAAD),"『통일전략』제16권 제4호 (2016), pp. 143-166.

16) 박광득, "제2장 사드배치 문제와 중국에 대한 외교전략 연구,"『통일전략』제16권 제4호 (2016), pp. 39-74; 박휘락,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국제관계연구』제21권 제1호 (2016), pp. 33-63; 박근재,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전략연구』제23권 제1호 (2016), pp. 37-66.

17) 고영대, "중국 겨냥한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창작과비평』제43권 제3호 (2015), pp. 554-565; 서재정, "사드와 한반도 군비경쟁의 질적 전환,"『창작과비평』제43권 제2호 (2015), pp. 414-440.

본고는 국가인정은 국가의 정체성과 양국 지도자 및 국민 간의 심리/인지적 친밀도와 관련된 포괄적이면서도 단계적인 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 헤겔과 호네트의 인정투쟁이론은 이러한 불인정의 상황이 어떻게 인정투쟁으로 발전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인정을 통한 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단계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분석과 미래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헤겔의 철학이 그의 인식론에서 최종단계인 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목적론은 웬트(Alexander Wendt)의 세계정부론처럼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19]

둘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국가나 국가를 대표하는 정책결정자가 상대국의 의도를 인정하지 않거나 오인하는 경향에 집중되었는데, 본고는 정책결정자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이나 제한된 정보로 인해 자국의 정체성에 대한 오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국가관계를 인정, 불인정, 오인을 포함한 다양한 맥락에서 분석할 예정이다. 국가 간 인정의 문제를 살펴보면 정책결정자들이 상대국가의 행위에 대해 "불인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외교 분쟁을 시작해서 제재나 군사적 수단을 포함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분명히 한국이 중국의 핵심 안보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한국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중국이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경우 보통 모든 책임을 타국에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줄곧 단호하게 반대해왔지만 한국의 국론은 분열되었고, 사드 관련 중국의 경제제재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을 망설이는 등 자중지란(自中之亂)의 상태를 보였다. 특히,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싼 갑론을박과 이러한 분열을 야기한 루머성 주장과 언론의 이념적 성향에 관한 논란도 있었다.[20]

---

18) 이기완, "사드와 AIIB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한국,"『국제정치연구』제18권 제1호 (2015), pp. 331-346; 김동엽, "사드 한반도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과 한반도 미래,"『국제정치논총』제57권 제2호 (2017), pp. 290-327.

19) Alexander Wendt, "Why a World State is Inevitabl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9, No. 4 (2003), pp. 491-542.

20) 박휘락,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의 루머와 확증편향,"『전략연구』제23권 제1호 (2016), pp. 5-36; 홍주현·손영준, "사드 루머(THAAD rumor) 보도에 나타난 한국 언론의 정파

한국의 대외정체성이 정권의 교체에 따라 혹은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사드 배치 결정의 전후에 상당히 변화해 왔는데, 정체성 혼란과 연동된 정책의 변화를 타국에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또한 냉전기 반중정책에서 냉전의 종식, 한중수교(1992),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2008년), 자유무역협정 체결(2015) 등과 함께 서서히 중국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정체성을 정책결정자가 인정하지 않거나 오인하면서 사드 배치 결정을 내렸을 경우가 높다. 이러한 불인정이나 오인 현상에 대해서는 라캉의 정신분석이론을 이용해 진단한다.

요약하면 본고는 인정의 과정에서 다양한 층위와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발견한 헤겔과 호네트의 연구와 인정의 단계에서 인정투쟁을 심리/인지적 문제로 접근해서 오인(misrecognition)이라는 측면에서 분석을 가능케 한 라캉의 연구를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써 인정의 단계와 과정에 대한 설명력을 더하고자 한다. 국제관계에서 인정의 문제는 린더먼(Thomas Lindemann)과 링마(Erik Ringmar)가 편저한『인정의 국제정치(*International Politics of Recognition*)』가 있지만,[21] 그 전에도 스웰러(Randall Schweller)와 같은 신고전현실주의자는 심리/인지적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국가유형을 사자, 늑대, 자칼, 양 등으로 분류했다.[22] 국내에서도 헤겔의 인정이론을 이용한 논문들이 심리/인지적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양자, 다자관계들을 분석하고 있다.[23]

라캉의 이론은 제한적이지만 국제관계학에 접목되고 있는데, 솔로몬(Ty Solomon)의 경우 라캉의 결핍을 겪는 분열된 주체(split subject)의 개념과 라클라우(Ernesto Laclau)의 헤게모니(hegemony) 개념을 접목하여 왜 "테러와의 전

성,"『한국언론정보학보』 제84권 (2017), pp. 152-188.

21) Lindemann and Ringmar (2014).

22) Randall L. Schweller,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1 (1994), pp. 72-107.

23) 권기붕, "21세기를 지향하는 헤겔적 국제정치 패러다임 이론: 인정의 메커니즘을 통해,"『OUGHTOPIA』 제20권 제1호 (2005), pp. 329-352; 김동하, "인정의 비대칭적 구조와 공동체성 그리고 종교: 헤겔 통합이념을 통한 인정이론의 재구성,"『정치사상연구』 제15권 제1호 (2009), pp. 158-186; 손기영,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본 동북아 국제관계와 규범공동체의 형성,"『국제정치논총』 제55집 4호 (2015), pp. 41-74; 오승희, "전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일국교정상화: 하나의 중국론에 대한 인정론적 접근,"『한국정치학회보』 제51권 제1호 (2017), pp. 73-98; 강수정, "일본의 대중국 인식에서 정체성과 인정의 문제: 전후 국가정체성과 중국의 불인정에 대한 인식과 대응,"『아세아연구』 제60권 제2호 (2017), pp. 222-262.

쟁(war on terror)"이 미국사회에서 주류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제브닉(Andreja Zevnik)은 라캉의 향유(jouissance)라는 개념을 이용해 관타나모만 해군 기지(Guantanamo Bay Naval Base)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과 저항을 분석함으로써 오이디푸스적 정치질서에서 벗어난 대안적 정치질서를 시사한다.[24] 본고에서는 헤게모니 이론가인 라클라우 대신에 공동체 이론가들인 헤겔과 호네트를 원용해서 라캉의 이론과 조화시킴으로써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한국과 중국이 어떤 인정의 단계에 있고 이러한 인정투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III. 인정이론과 라캉의 오인

이 절에서는 헤겔과 호네트의 인정이론과 라캉의 오인에 관한 정신분석이론을 이용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가 간 인정 문제를 분석한다. 인간사회에서 인정은 핵심적인 문제이다. 타자에 의한 불인정이나 오인은 자아의 파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특히 식민지배를 겪은 민중들이나 한 사회 속에서 차별받는 집단일 경우 심리적으로 엄청난 위화감과 모멸감을 겪게 되는데, 지배계급으로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25] 이런 맥락에서 테일러와 같은 공동체주의자들은 인정이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필수적인 조건(vital human need)이라고 보았다.[26] 인정이론은 불인정이나 오인이 인정투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혹은 정치적 저항운동의 심리적 구조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이다.[27]

호네트는 헤겔과 미드(George Herbert Mead)의 개념과 방법론을 종합하여

24) Ty Solomon, *The Politics of Subjectivity in American Foreign Policy Discours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15); Andreja Zevnik, *Lacan, Deleuze and World Politics: Rethinking the Ontology of the Political Subject* (Abing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6).

25) Frantz Fanon, *Black Skin, White Masks* (New York: Grove Press, 1967).

26) Taylor (1992), p. 26.

27)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Recognition," https://plato.stanford.edu/entries/recognition/ (검색일: 2017년 9월 25일).

인정에는 3가지 층위가 있다고 주장한다.[28] 이 3가지 인정의 층위는 1) '사랑'에 근거한 가족과 같은 원초적 공동체의 형성, 2)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상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적 공동체의 형성, 3) 공통의 가치와 공동운명체를 추구하는 윤리적 공동체의 형성이다.[29] 호네트의 3가지 인정의 층위를 유사한 조직원리로 국가 간 관계와 동아시아와 같은 지역사회 형성과정에 적용하면, 1)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통한 국민국가의 형성, 2) 법적인 수교 조약을 통한 "낮은 수준의 인정"인 지역사회의 형성, 3) 공통의 가치와 공동운명체를 추구하는 "높은 수준의 인정"인 지역공동체의 형성이라는 국가 간 공동체 형성에 관한 3단계 모델을 도출할 수 있다.[30]

이 3단계 인정 모델을 한중관계에 대입해 보면 1단계로 1940년대에 각각 민족국가를 형성한 한국과 중국은 상호 불인정의 상태에서 이념대결을 벌였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1992년 법적 인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수교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를 인정하면서 2단계에 진입했다. 문제는 당시에 상호간의 가치, 정체성, 역사관 등에 관한 인정투쟁이 높은 수준의 인정이 가능할 만큼 전면적으로 발생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상호 경제관계의 중요성과 보편적 세계질서의 편입 등 정치경제적 이익의 추구가 초점이 되면서 법적·경제적 행위자로서의 상호인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후 양국은 무역과 투자 및 인적교류를 통해 괄목할 만한 관계개선을 이루었지만, 2003년 이후 몇 년간 지속된 중국의 동북공정을 둘러싼 인정투쟁이 보여주듯 상호 역사인식의 차이가 양자관계의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되었다.[31] 역사인식의 문제는 양국 정부가 나서서 상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모면했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싼 격돌은 상당한 마찰을 겪은 후 타협을 통해 봉합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본고는 한중 간의 사드분쟁은 높은 수준의 상호인정이 결핍된 상황에서 오는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양국은 수교를 통해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상호간의 정치경제적 권리를 인정했지만, 역사 문제, 사드 배치 문제 등에서 인식의

28) Honneth (1996).
29) Honneth (1996), p. 94.
30) 손기영 (2015), pp. 49-54.
31) 손기영 (2015), p. 60.

차이를 보이면서 안보를 포함하는 근본적인 국가정체성에 대한 인정투쟁 단계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수교를 통해 타자의 정체성과 지위에 대해 일부만을 인정했고, 정체성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불인정하거나 오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3단계에서 지역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하려면 사드로 인한 격돌과 같은 인정투쟁이 필연적임을 유추할 수 있다.

본고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은 안보관련 정체성에 대한 불인정 혹은 오인으로 야기되었으며 이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이며 포괄적인 국가정체성의 인정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헤겔과 헤겔을 추종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불인정 상태의 해소방안은 인정투쟁을 통해 자아와 타자의 거리를 좁히거나 자기 타자화(self-othering)를 통해 타자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다.[32] 이것이 실패하면 인정투쟁은 전쟁을 포함한 과격한 투쟁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33] 헤겔의 인정이론은 인정투쟁을 통해 불인정의 상태를 해소하면서 인정으로 나아가는 변증법적 과정에 대한 설명이므로, 성찰과 절대지식의 획득을 통한 공동체의 형성에 대해 낙관적이어서,[34] 인정투쟁의 과정에서 행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식 상태를 겪는지에 대해 분석적이지 못하다. 헤겔은 성찰과 절대지식을 통해 주체(subject)의 형성을 역설하지만, 많은 경우 주체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고, 심지어 자기 정체성에 대해 오인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라캉은 데카르트적 주체를 부정하고 구조주의 이론을 받아들인 정신분석학자이다. 헤겔 같은 근대주의자와 라캉 같은 포스트모던 정신분석학자가 같은 문제를 두고 상이한 시각을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인정과 오인의 과정은 흥미로운데, 본고에서는 헤겔과 호네트의 인정의 단계론을 기본 틀로 하면서 각 단계 사이에 발생하는 인정투쟁을 분석하기 위해 라캉의 오인에 관한 연구를 이용해 설명력을 높이고자 한다. 라캉은 '프로이트로의 귀환(return to Freud)'을 주장

32) Robert Williams, *Recognition: Fichte and Hegel on the Other*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92), pp. 59-68.

33)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Elements of the Philosophy of Right*, translated by H.B. Nisbe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 362.

34) Daniel Berthold-Bond, *Hegel's Theory of Madness*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p. 112.

한 프로이트주의자이지만, 헤겔주의자인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었는데, 그의 저서 『에크리』의 「주체의 전복과 욕망의 변증법」에서 보면 헤겔의 절대 지식(absolute knowledge)과 변증법(dialectic)을 인용하거나 반박하면서 방법론에서는 상당 부분 헤겔을 원용하고 있다.[35] 또한 헤겔과 라캉이 유사한 부분은 양자가 주장하는 주체가 모두 타자의 인정을 욕망하며 타자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치환시킨다는 부분이다.[36] 이 과정에서 헤겔과 라캉의 주체에게는 '자기 타자화'가 발생하는데, 헤겔은 타자화된 자아가 성숙된 모습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강조하지만, 라캉은 자아와 타자 간에 동일시(identification)와 소외(alienation)가 동시에 일어나는 '소외된 동일시(alienating identification)'를 주장한다.[37] 헤겔과 라캉은 주체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보았지만, 근대성을 신봉하는 헤겔에게 이 과정은 통합으로 가는 통과의례이지만, 포스트모던주의자인 라캉은 분열적이고 불완전한 주체에 초점을 맞춘다.[38]

헤겔과 같은 근대주의자가 주체의 형성은 상대와의 투쟁을 통한 상호인정에 의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면, 라캉은 데카르트적 주체를 해체하면서 오인과 환상을 통해 형성되는 다양하지만 분열된 정신세계를 상정한다. 라캉은 인간정신이 만들어낸 질서의 세계를 3단계로 보았는데, 상상계(the imaginary), 상징계(the symbolic), 실제계(the real)가 그것이다. 첫째, 라캉을 유명인으로 만든 '거울단계(mirror stage)'는 상상계에 속하는데 자신의 육체를 제어하지 못하고, 언어구사도 불가능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어린아이에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신과 자신의 환경의 구분이 불가능한 유아기의 어린아이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전신을 처음으로 응시하면서 나르시스적 자기애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라캉이 말하는 첫 번째 오인이다. 라캉에 따르면 거울에 비친 모습은 자신의

35) Lacan (2001), p. 226; 홍준기, "헤겔의 주인-노예 변증법과 라깡: 강박증 임상,"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제9권 제2호 (2007), pp. 109-145.

36) 권순정, "라캉의 환상적 주체와 팔루스," 『철학논총』 제75집 제1권 (2014), p. 29.

37) Hamid Naficy, "Self-Othering: A Postcolonial Discourse on Cinematic First Contacts," in Fawzia Afzal-Khan, Kalpana Seshadri-Crooks (eds.), *The Pre-occupation of Postcolonial Studies*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0), p. 296.

38) Fredric Jameson, "Imaginary and Symbolic in Lacan: Marxism, Psychoanalytic Criticism, and the Problem of the Subject," *Yale French Studies*, No. 55/56 (1977), p. 354; 정문영,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의 개인 주체의 위상," 『비평과이론』 제2권 (1997), p. 39.

모습이지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자기 시점에서 본 하나의 '타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39] 거울에 비친 신체의 특정 이미지는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 이상화가 가능한 타자적 대상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상상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첫 단계로서 아이가 '어머니'에게 의존을 통한 일체화를 느끼는 단계이기도 하다. 아이에게 어머니는 욕망의 대상으로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정신분석학자들은 아이도 그녀의 부족을 채워주는 욕망의 대상인 '팔루스(phallus)'라고 본다.[40]

둘째, 아이는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욕망이 자신에만 머물지 않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아버지의 존재를 인지하고 언어의 세계로 진입하면서 어머니의 세계와의 일체화는 깨어진다. 상징계에서 아이는 아버지의 법을 따르며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상징적 거세라고 할 수 있다. 상징계에서 인간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 주체성을 확보하려고 하면서 타인의 욕망을 받아들이게 된다.[41] 하지만 기표(signified)로 가득한 세계에서 인간은 욕망의 환유적 치환이라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주체는 분열되고 인정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은 채 남는다. 상징계에서 발생하는 오인은 자아에 대한 잘못된 인정을 말하는데, 라캉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자신이 자신에 대해 가진 이미지와 역할과 타자에 의해 강요된 이미지와 역할 사이에서 하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분열된 정체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라캉은 주체로서의 자아는 탈중심화되며 자아의 의도와 의지의 영역을 넘어 언어라는 상대적이고 상호주관적 매개체에 의해 새로운 자아들이 형성된다고 보았다.[42]

셋째, 언어로 표현되는 상징계에서 포착될 수 없는 곳이 실제계이다. 실제계는 상징계에서 타자의 욕망을 추구하고 타자가 만든 법, 규범, 혹은 문화를 준수하며 살아가던 자아에게 상징계가 금지한 주체의 결여를 채워주는 곳이다. 라캉은 실제계를 정의하기는 쉽지만 언어로 표현되기는 어려운 세계이고, "익숙하

39) Jane Gallop, "Lacan's 'Mirror Stage': Where to Begin," *SubStance*, Vol. 11/12, Vol. 11, No. 4-Vol. 12, No. 1, Issue 37-38 (1982/1983), p. 121.

40) 권순정 (2014), p. 41.

41) Lacan (2001), p. 4

42) Frederick M. Dolan, "Political Action and the Unconscious: Arendt and Lacan on Decentering the Subject," *Political Theory*, Vol. 23, No. 2 (1995), pp. 330-352.

지만, 우리가 억누르고 있는 사실"의 영역이라고 보았다.[43)]

Ⅳ.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인정과 오인

국가정체성의 역사적 변천을 논할 때 냉전기의 한국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서 국가로서의 생존의 길을 걸어온 신생공화국이었다면, 21세기의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대외정체성을 친미 일변도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정체성에 대한 오인일 수 있다. 미국과의 동맹에 버금가게 중국과의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전략적 대응의 실패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는 정신 상태와 분열되어 다중적으로 보이는 대외정체성에서 기인하는 이러한 성장통은 당분간 치유되기 어려운 것이지만, 상징계에 있는 주체는 다양한 인정 혹은 오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언어의 범람 속에서 불인정과 오인을 해소시킬 방법을 추구하게 된다. 이 절에서는 라캉의 정신분석이론을 이용하여 미국, 한국, 중국의 인지/심리적 증상을 진단하고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킬 방법을 모색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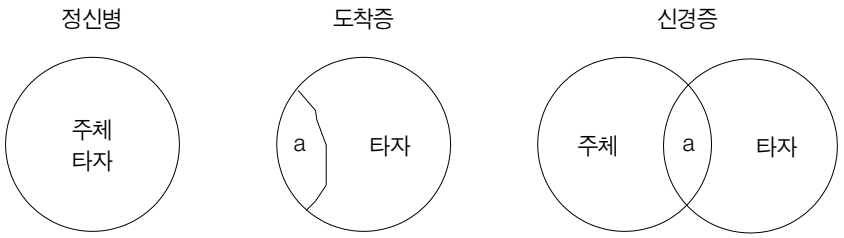
1. 국가행위의 오인증상: 도착증, 정신병, 신경증

라캉의 정신분석이론을 사드 분쟁을 촉발시킨 미국과 한중 관계에 대입해 보면 사드 배치를 둘러싼 3국의 입장이 전략적, 혹은 이성적 판단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실증주의가 포착할 수 없는 욕망, 인정, 오인 등의 심리/인지적 문제이기도 하다. 상징계의 모든 주체들은 라캉의 정신분석이론으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환자이며, 가장 흔한 세 가지 증상은 정신병(psychosis), 도착증(perversion), 신경증(neurosis)이다.[44)] 욕망의 대상을 a라고 하면 정신병, 도착

43) Lacan (2001), p. 128.

44) 문장수, "인간범주에 대한 라캉의 구조적 정의에 대한 비판," 『철학논총』 제71집 (2013), p. 48.

〈그림 1〉 정신병, 도착증, 신경증에서 주체와 타자의 관계



출처: 문장수·심재호 (2015), p. 206

증, 신경증에서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그림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사드 논쟁을 촉발시킨 미국의 증상을 먼저 분석하고 차례로 한국과 중국의 증상을 설명하고 문제를 완화시킬 방법을 제시한다.

1) 미국: 도착증/절편음란증(fetishism)

미국은 세계 1위의 군사강대국이지만 동북아에서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만으로는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또 다른 욕망의 대상인 사드 배치를 추진한다. 기표적 생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욕망과 이미지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국가는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늘 실재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주체의 결여를 채우기 위해 욕망한다.[45] 미국은 결여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소련, '악의 축(axis of evil),' 테러리즘과 같은 새로운 적을 만들어 내면서,[46] 이에 대응해 스타워즈 계획(Star Wars)이라고 불린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 같은 신병기에 집착했다. 사드 배치도 큰 틀에서 수십 년간 추진되어 온 미사일방위구상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정신 상태를 분석해 보면 신무기에 대한 욕망이 지나쳐 이 무기가 국제정치에서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도착증의 일종인 '절편음란증(fetishism)' 증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전술핵의 재배치 또는 다양한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고려될 수 있지만 미국이 사드에 집착하

45) 권순정 (2014), pp. 27-51.

46) David Campbell, *Writing Security: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2).

는 이유는 적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면서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과 고성능 레이더의 전진 배치가 미국의 전 지구적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차지하는 상징성과 효용성이 단순 공격 무기인 전술핵을 포함한 다른 어떤 무기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2014년 6월 3일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사드 문제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까지는 1년 9개월이 걸렸다. 왜냐하면 한국 국방부는 양국 간에 사드 배치에 관한 협의가 없었고, 미국이 요청하면 검토하겠다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2015년 2월 4일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창완취안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미국과의 협의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3 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을 견지했지만, 2015년 3월 13일 한미연합사령부가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두고 비공식 부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10월 30일에는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이 한미 양국이 사드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의혹을 키웠다. 그러나 2015년 11월 2일의 제4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도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는 협의된 것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입장이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바뀌기 시작했고, 13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자 국방부는 한미 간에 사드 배치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공동실무단 구성을 협의했다. 2월 9일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박노벽 주러 한국대사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2월11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만나 "안보 관련 조치를 주변국 이해와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경고했다.[47] 다음날 왕이 부장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을 언급하면서 사드 배치를 "유방(중국)을 겨누는 항우(미국)의 칼춤"에 비유했다. 중국의 확고한 입장은 2월 15일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나왔는데,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태도

47) 『연합뉴스』, 2016년 2월 12일.

는 결연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중국의 사드 배치 포기에 대한 압력에 맞서 2월 17일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은 PBS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자신들이 가진 대북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국은 우리와 동맹국의 방어를 위해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2월 18일,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한국의 사드 기지를 1시간이면 파괴할 수 있다면서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48)]

중국의 반대에 직면해 2월 23일 한미 양국은 공동실무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약정 체결을 연기하고 24일 존 케리 국무장관은 미중 외교장관회담 직후 비핵화만 이룰 수 있다면 사드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3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공식 채택했다. 북한이 3월 3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방사포를 6발을 발사하자 4일 한미는 사드 배치를 논의할 공동실무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몇 달 간의 준비를 거쳐 7월 8일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7월 5일에도 국방부는 배치 시기 및 지역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가 발표된 배경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었다. 중국은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중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약속해놓고 후에 돌연히 태도를 바꿔 성급하게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며 사드 배치 결정을 비난했다.[49)]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반추해 보면, 미국은 일본에 2기의 사드 레이더 배치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주한 미군에 사드 포대 배치를 희망했고,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연계해 사드 배치를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사드에 대해 절편음란증 증세를 보이는 미국의 요구에 끝까지 저항할 수 없었다.

미국측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북한전문매체 '38노스' 기고자이자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미사일전문가인 마이클 엘레먼 선임연구원은 "사드가 저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패트리엇 시스템과

48) 『연합뉴스』, 2016년 2월 22일.

49) 『人民日报』, "人民日报钟声: 中国安全利益不容蓄意损害," 2016년 8월 3일.

결합되면 북한의 미사일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지만 북한이 사드를 압도하는 기습적인 대규모 미사일 발사 등 사드의 영향을 제한할 대응 능력을 개발할 경우 "북한의 핵 공격을 완전히 막아낼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50]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소속으로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연구원도 사드 배치는 필요하지만 "이번 조치는 북한의 위험에 대처하는 전략과 관련해 미중 양국 간의 틈새를 더욱 벌릴 뿐"이라고 우려했다.

주한미군은 관련 자료에서 사드 포대의 "AN/TPY-2 레이더는 일본의 AN/TPY-2 레이더와 동일한 것이지만 한국에 배치될 레이더의 역할과 임무는 일본의 레이더와 다름으로 다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며 사드의 임무는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명시한다.[51] 사드가 기존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체계에 통합될 경우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초래되는 손실을 크게 줄일 개연성이 높지만,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엘레멘과 핵무기 영향력 분석 전문가인 마이클 재거릭은 "북한이 화성과 노동미사일을 수백 발가량 발사할 경우 이들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에는 엄청난 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한데 "현재 사드의 한 개 포대는 20개에서 50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요격을 하려면 다시 발사관을 장착하는 데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하나의 사드 포대로는 제한적인 방어만이 가능하다고 보았다.[52] 즉 2개의 사드 포대가 배치되어야 지상 발사된 미사일의 90퍼센트를 요격할 수 있으므로 10퍼센트의 미사일은 목표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쪽을 향해 조준되어 있는 사드를 재조준해야 되므로 방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사드 1개 포대의 배치에도 엄청난 국내외적 저항이 있었고, 이미 중국에게 추가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한국과 주한미군의 방어에 사드는 제한적

50) 『연합뉴스』, 2016년 7월 9일.

51) United States Forces Korea, 2017, "THAAD Fact Sheet," Sept. 7, http://www.usfk.mil/Media/Press-Releases/Article/1301280/thaad-fact-sheet/ (검색일: 2017년 9월 30일).

52) Michael Elleman and Michael J. Zagurek, "THAAD: What It Can and Can't Do," *38 North*, March 10, 2016.

기능만을 가지는 무기체계로 전락했다.

2) 한국: 정신병/자아경계상실증과 정신분열증

한국은 미국의 군정이라는 인큐베이터를 통해 탄생했고, 한국의 탄생에 어머니의 역할을 한 미국은 한국에게 욕망의 대상이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국은 상상계 속에서 미국과의 일체감을 느껴왔다. 한국은 미국의 오인된 팔루스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늘 강조되었고, 이런 맥락에서 한국도 미국의 부족을 채워주는 존재로 오인되었다.

사드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욕망은 한국을 자신의 관점에서 창출된 세계인 상상계에서 다양한 언어와 행위가 난무하는 상징계로 던져지게 했고, 상징계에서 한국은 분열된 주체로 전락했다. 한국은 새로운 세계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병 환자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데 특히 정신병의 일종일 편집증(paranoia)과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증상이 나타난다. 70년 이상 지속된 분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 편집증적인 불안 증세를 보이는데 북한의 핵무장으로 이 증세는 더 심화되었다. 한편 한미동맹의 긴밀성을 강조하면서 자아가 독립개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자아경계상실증이나 일부에서는 사드와 같은 특정 무기에 대해 망상적인 신뢰를 하는 인지 결함(cognitive deficit)으로 대표되는 정신분열증 증상도 보인다.[53]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3월 26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가를 발표하거나,[54] 9월 3일 베이징 천안문 성루 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항일승전 70주년'을 기념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지켜보며 박수를 쳤을 때 한국의 외교는 대미의존도를 낮추고 균형외교로 선회하는 인상을 주었다.[55] 박대통령의 천안문 성루 등장은 상징성이 큰 행위인데,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차질을 주는 행동으로 해석되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발표 며칠 전까지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해진 게 없다

---

53) 오상우·리광철·백영석·박민철·정일관, "정신분열증 환자의 인지 결함," 『한국심리학회지』 제21권 제2호(2002), pp. 377-389.

54) 『연합뉴스』, 2015년 3월 26일.

55) 『한겨레』, 2015년 9월 4일.

는 태도로 일관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배치 지역을 거론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협의 중이며 아직 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사드 배치 결정과정을 국방부가 검토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결정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오늘(8일) 한민구 장관을 만났더니, ‘이번 발표는 국방부의 결정이 아니라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긴급히 결정했다’고 털어놓았다”며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했다.[56] 이러한 주장에 국방부는 “지난 2월 한·미 공식 협의 착수를 발표한 이래 국방부는 주무부처로서의 모든 협의와 논의를 주도했다”고 반박했다.

중국이 사드 문제를 핵심이익의 문제로 보면서 북핵 문제는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었고, 한국으로서는 북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안보이슈이기 때문에 한중 간의 전략적 간극은 벌어졌다. 특히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의 외교, 안보정책결정을 김관진 실장을 비롯해 군 출신 인사들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북핵 관련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를 주장해 온 외교부 장관은 설 입지가 없었다. 윤병세 장관은 사드 배치 발표 당일인 8일 오전 10시36분 백화점에서 양복을 산 뒤 11시 11분 매장을 떠났는데 사드 발표(11시) 때는 백화점 매장에, 중국이 공식 반응(11시 30분)을 한 때에도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국회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57]

7월 11일에 한민구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고, 13일에는 한미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공식 발표했다. 주민 피해를 우려해 김항곤 성주 군수가 사드 대체 부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자 한미공동실무단이 후보지 3곳에 대해 실사를 한 후 9월 30일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부지로 확정 발표했다. 국방부는 롯데 측과 부지 취득 방식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부지 교환 방식에 대한 합의에 시간이 걸렸고, 롯데상사 이사회가 성주골프장 제공을 승인하자 2017년 2월 28일 롯데와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한민구 장관은 3월 1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전화협의를 통해 사드의

56) 『한겨레』, 2016년 7월 8일.
57) 『한국일보』, 2017년 7월 10일.

조속 운용을 합의했고, 6일 미군은 C-17 수송기로 오산 기지에 사드 발사대 2기를 공수했다. 4월 20일에는 부지 내 30여만 제곱미터의 공여 절차를 완료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26일에는 사드 발사대 2기 및 관련 장비를 성주 기지에 야전 배치했다. 전격적인 사드 포대의 배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은 한국이 동맹국이면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태도를 바꾸면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고 사드 잔여발사대 4기는 1년여의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7월 28일에는 국방부가 사드 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초기의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공여된 성주골프장 부지는 32만여m^2인데, 미국 측이 보내온 설계 자료에는 사업면적이 10만m^2로 돼 있기 때문에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었다.[58]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방, 군사시설 설치 시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사 부지 규모 기준인 33만m^2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결정되었다.[59] 7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ICBM 발사 후 갑자기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에 대해 임시 배치를 지시했고, 9월 7일에는 주민들과 관련 단체들의 저항을 뚫고 임시 배치가 완료되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잔여 발사대 4기 임시 배치를 중국에 알렸는가"라는 질문에 중국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60]

한국은 사정거리 문제 때문에 서울을 방어할 수 없는 사드 배치에 동의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압력과 협박에 직면해 정책에 혼선을 가져왔고, '자아경계상실증'이나 '정신분열증'과 유사한 정체성의 혼란 증세를 겪었다.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물밑대화를 통해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을 신속하게 봉합함으로써 정책적 대처능력에서 차이를 보여주었지만, 미중 전략경쟁의 구

58) 『연합뉴스』, 2017년 6월 1일.
59) 『한국일보』, 2017년 6월 1일.
60) 『조선일보』, 2017년 9월 7일.

도에서 한국이 처한 안보전략의 딜레마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

정신병 증세를 보이는 행위자(주체)는 어머니(타자)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존재 전체를 어머니에게 의탁하기도 한다.[61] 정신분석학에서 편집증 치료를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는 것은 비효과적이므로, "편집증 환자가 스스로 위험하다고 지각한 상황을 재평가하면서 그 상황에 대처하는 자신의 능력을 재평가해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62] 정신분열증의 완화에는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 필요한데 의사소통기술, 정보처리기술, 사교기술, 자기주장기술 등이 유효하다.[63]

3) 중국: 신경증/공포증과 강박증

사드 논쟁으로 야기된 상징계에서 중국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중국은 미국의 팔루스 역할을 하던 한국도 못마땅한 존재였는데 사드라는 미국의 새로운 욕망의 대상이 등장하자 더욱 분노하게 된다. 중국은 신경증 증세를 보이는데 마치 미국과 같은 '세계 경찰국가'처럼 경제제재를 가하는 중국의 히스테리(hysteria) 증상은 중국의 대미 공포증(phobia)이나 중화주의로 표현되는 과거 회귀적 사유에 집착하는 강박증(obsession)의 발현일 수도 있다.[64] 강박증은 스스로 원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는 불안장애현상으로 환자는 과거에 집착하고 자신이 현재와 미래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는 상반된 자학적 행동을 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정신적 고통을 망각하기 위한 의식(ritual)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65]

시진핑 주석은 2015년 보아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운명공동체'라는 화두를 제시하면서 "중국, 한국, 일본 3국이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66] 중국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드는 중심

---

61) 문장수·심재호, "강박증에 대한 프로이트적 정의와 원인에 대한 비판적 분석," 『철학논총』 제82권 (2015), p. 206.

62) 『크리스천투데이』, 2013.

63) 김동건·이문숙·이종길, "치료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대인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The 1999 Seoul International Sport Science Congress, 1999), pp. 1027-1034.

64) 문장수 (2013), p. 49.

65) 문장수·심재호 (2015), p. 214.

66) 『한겨레』, 2015년 3월 29일.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의 갈등과 경제보복은 공동체 형성이라는 목표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상호인정이라는 대의를 크게 훼손하는 자학적인 행위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드 레이더에 대한 공포증을 보이고 있다.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2016년 2월 15일 브리핑에서 "사드의 적용범위, 특히 엑스(X)-밴드 레이더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넘어서 아시아 대륙의 한복판으로 깊이 들어온다"며 북핵 문제를 이용해 중국의 안보이익을 훼손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67] 인민일보는 논평에서 "한미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조선 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정한 의도는 동북아 안보 구도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68] 중국은 그동안 남·동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등을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용하는 안보 이익이라는 개념이 핵심 이익에 버금갈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 "사드 탐지 범위는 베이징 등 수도권 전역을 포함할 수 있어 핵심이익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69] 특히, 중국은 사드 포대와 함께 운용하는 엑스-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경보와 추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70]

안보이익이라는 개념은 사드 배치가 현실화되면서 나타난 중국의 정세판단에서 등장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6년 2월 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 때만 해도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기존 3원칙을 제기했지만 이후 안보이익이라는 개념을 일반화했다. 중국이 안보이익을 추구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이 주장한 것처럼 군사 문제는 군사적 대응이 바람직한 것일 수 있는데, 경제제재를 통해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침해하는 것은 중국의 대응이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이다.[71]

---

67) 『한겨레』, 2017년 6월 1일.

68) 『人民日报』, 2016년 8월 3일.

69) 『人民日报』, 2016년 8월 3일.

70) Ankit Panda, "What Is THAAD, What Does It Do, and Why Is China Mad About It?" *The Diplomat*, February 22, 2016.

한국이나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인정은 하고 있으나, 동북아에서 중국의 정치, 안보적 위상에 대한 인정은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해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평(社評)을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남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치는 행위"라며 "사드가 북핵과 같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악성종양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72] 정신분석학적으로 나르시시즘 상태에 빠져 있는 강박증 환자를 이러한 증세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에 대해 라캉은 "변증법적 엄격함을 끝까지 밀고 나가게 함으로써" 환자가 어떻게 "좌절(frustré)되었는지를 그에게 깨닫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73] 결국 중국의 강박증은 중국이 염원하는 초강대국으로의 부상이 제한적이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며,[74] 중국이 취하는 입장을 미국과 주변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복적으로 확실히 보여줄 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한중 간 인정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중관계는 수교라는 법적인 인정을 넘어서 상대방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경제적 교류는 예외로 하는 정치, 군사적 긴장관계로 회귀할지를 판가름할 갈림길에 있다. 일단 사드 문제는 한중 간의 합의로 봉합되었지만, 한중 상호인정에 걸림돌로 존재하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현상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므로 한중관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치, 군사적 긴장관계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75]

인정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인정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려면 행위자가 라캉이 말하는 분열된 주체가 아니라 헤겔이 말하는 주체성(subjectivity)을 회복해야

71) 자칭궈 교수 이메일 인터뷰 (2017년 4월 5일).
72) 『環球時報』, 2017년 9월 7일.
73) 홍준기 (2007), p. 139.
74) David Shambaugh, *China Goes Global: The Partial Pow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75) 김홍규 (2016), pp. 25-58.

한다. 미국과 같은 타자에 대한 의존은 한국을 미국의 세계전략의 객체(object)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과 같은 수준의 행위자는 진정으로 타자를 인정하거나 인정을 받을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성과 객체성의 논리는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master-slave dialectic)에 잘 설명되어 있다.[76]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노예로부터 인정받고 싶지만, 노예가 주인을 인정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의 부재로 인해 진정한 인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한중 간의 낮은 수준의 인정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이 보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안보 행위자로 변화하는 것과, 중국의 정체성과 지위를 어느 수준에서 인정하느냐의 문제다. 또한 중국도 한국에 대해 단기간에 정체성의 변화를 수반하는 과도한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임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나르시스적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데, 마치 주변국이 높아지는 중국의 위상에 빠르게 굴복할 것이라고 오인하고 있다. 샴보(David Shambaugh)가 지적하듯 중국은 미국과 비교해 아직 '불완전한 강대국(partial power)'이다.[77]

1972년의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2002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야기된 논란에서 보듯이 탄도탄요격미사일의 문제는 강대국 간의 전략적인 문제인데, 한국은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외면하면서 일방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사드 배치에 동의를 해주었다. 물론, 중국이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지만,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이 자초하거나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고는 사드의 전략적·기술적 효용성에 대해 다양한 논란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지만, 관련국이 자신과 상대를 오인하는 부분은 철저히 분석되어서 미래의 한중관계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한중은 1992년 수교와 함께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후 점진적으로 양자관계를 수사적으로는 협력동반자 관계(1998년), 전면적 협력 관계(2000년), 전면적 협

76) Robert Williams, *Hegel's Ethics of Recogni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pp. 59-68.

77) Shambaugh (2013).

력동반자 관계(2003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2008년)로 격상시켜왔으나, 사드 문제 발발과 함께 양자관계는 재조정의 단계로 접어들었다.[78] 한중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거창한 이름을 사용해 서로를 인정하려고 했지만, 한미동맹이 존속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을 도모할 수는 없었다. 물론 한국의 미래안보전략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에 의존해야 되지만, 한중안보협력을 어떻게 제고시킬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중국과의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목표로 2017년 6월 20일 베이징에서 제8차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한중전략대화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위급 대화채널이다. 그러나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 부장이 사드 문제를 포함한 양자관계의 전반적인 의제들을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79] 하지만 2017년 10월 사드 문제로 파국을 맞을 뻔했던 3,600억 위안(약 64조 원·56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연장됨으로써 양국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였다.[80]

한중전략대화는 한미 간 전략적 협력과 비교했을 때 협력의 깊이와 폭의 문제를 분명히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6월 30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안보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81] 한미 외교·국방장관 2+2는 회의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7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 6월, 2014년 10월, 2016년 10월 등 2년에 한 번 4차례 열려 북핵을 포함한 전략적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증대로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2016년 2+2

78) 국방부 (2016), p. 137.
79) 『한겨레』, 2017년 6월 20일.
80) 『조선일보』, 2017년 10월 13일.
81) 『연합뉴스』, 2017년 7월 1일.

회의에서 합의된 EDSCG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인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러한 공식화된 채널 이외에도 한미 간에는 장차관급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대화가 진행 중이다.

한미 간의 수준으로 한중 간의 전략대화를 확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현재보다는 대화의 깊이와 폭을 확충해야 한다. 2017년 한중전략대화는 16개월 만에 재개된 것으로 양국은 2016년 2월 서울에서 전략대화를 가진 뒤 사드 문제로 후속 일정을 잡지 못했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한미동맹에 기초해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특별한 노력이나 성과는 없다.[82)]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한국의 전략은 한중전략대화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외교부 간의 대화에서 외교, 국방, 경제를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전략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미국이 중국과 이미 정례화된 장관급 전략대화를 진행해 온 상태에서 중국과의 고위급 전략대화의 개최는 한국 외교력의 문제이다. 미중은 2005년 8월 차관급에서 고위급 대화를 시작하였고, 2008년 말까지 총 6차례의 고위급 대화가 진행되었다. 2006년 12월부터는 고위급 대화에서 경제 문제를 따로 분리하여 부총리급의 경제전략대화를 개설하였는데 양자관계에서 경제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는 고위급 대화및 경제전략대화를 통합하고 대표의 수준을 높여 "미·중 전략·경제대화(U.S.-China Strategic & Economic Dialogue)"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전략부문과 경제부문이라는 두 개의 트랙을 통해 미국 국무장관과 중국의 외사담당 국무위원이 전략부문을 주관하고, 경제부문은 미국의 재무장관과 중국의 경제담당 부총리가 주관하는 형태를 취했다. 양국의 대화수준의 격상과 폭의 확대는 미국의 정책이 중국 위협론을 강조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하고 포용하면서 전략과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83)] 2016년의 6월 6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 팡화위안(芳華苑)

82) 『동아일보』, 2017년 5월 22일.

에서 열린 제8차 미중전략경제대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축사를 했고, 북핵 해법과 남중국해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양국의 대표들이 충돌하는 등 두 강대국 간의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84]

V. 마치며

라캉은 독자적인 존재를 부정하면서 "주체는 타자의 장에 종속된 상태로서만 주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85] 인간사회는 소외된 개인의 상상적 세계가 아니라 언어와 이미지가 범람하는 공간이므로 개인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때 상호 인정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북핵, 영토, 과거사 등의 청산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한 동북아 국가들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안보적 측면에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은 채 갈등과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시각에서 보면 역내 국가들의 갈등이 양국 간 전략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인정이론과 정신분석이론을 이용하여 사드 배치를 둘러싼 관련국의 심리/인지적 문제를 진단했다. 미국은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사드 배치를 실행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한국을 설득하고 압력을 가한 결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시켰다. 역사가 짧은 미국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타국의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국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대량살상무기나 신병기에 집착하는 것은 전략적인 면에서는 타당해 보이는데, 소련도 미국의 스타워즈계획이 촉발시킨 군비경쟁에서 사실상 백기를 들며 해체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경제발전 대신에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미국과 군비경쟁을 벌리며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사드 배치가 단기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깰지라도, 중장기

83) 김홍규, "제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와 진화하는 미·중관계: 한국에 대한 함의와 더불어,"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217호 (2012), p. 3.

84) 『중앙일보』, 2016년 6월 6일.

85) 권순정 (2014), p. 28.

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중국이 신병기를 개발하거나 다른 대응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전략적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 미국의 집요한 신병기의 개발과 배치에 대한 욕구에 지나친 공포심을 갖거나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절편음란증 증세를 보이는 미국의 욕망을 중국과의 대외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한국으로서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또한 한국은 중국이 보이는 대미공포증과 과거의 영광으로 회귀에 초점을 맞춘 강박증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해서 주체를 상실한 듯 보이는 한국의 자아경계상실증과 미중의 압력에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정신분열증 증상이다. 한국의 대외정체성의 혼란상황은 미중 경쟁구도와 남북분단 상황에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신분석학자들이 권고하는 것처럼 자신의 주체성에 대해 좀 더 자신을 갖고 미국(어머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중국(아버지)을 비롯한 주변국과 좀 더 진지한 대화와 협력을 시도해서 선순환적인 한미중 삼각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본고는 대화와 협상에 병적인 불편함을 보이는 한중 양국이 현재의 차관급 전략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정례화하는 문제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대화에 나설 때 한국은 한반도 안보의 이해당사자인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인식하고, 중국이 전통적으로 느끼는 해양세력에 의한 봉쇄의 위협 의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중 간의 전략대화를 본격화하면서 사드 문제는 미중 간에 양해가 되도록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정신분석학적으로 한국은 분노하는 아버지와 같은 중국에 의한 거세 콤플렉스를 겪으면서 상징계의 다양한 화자들 사이에 노출되어 정체성의 위기를 맞았다. 동북아의 안보지평에서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중국보다 분단과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한국이 중국의 감정과 정체성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미중이 대치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적절한 주체성을 발휘하는 한국이 취할 정책의 향방이 동북아가 시대착오적 냉전 상태를 지속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21세기 지역질서를 창출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수정. “일본의 대중국 인식에서 정체성과 인정의 문제: 전후 국가정체성과 중국의 불인정에 대한 인식과 대응.” 『아세아연구』 제60권 제2호 (2017).

고영대. “중국 겨냥한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창작과비평』 제43권 제3호 (2015).

국방부. 『201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6).

권기붕. “21세기를 지향하는 헤겔적 국제정치 패러다임 이론: 인정의 메커니즘을 통해.” 『OUGHTOPIA』 제20권 제1호 (2005).

권순정. “라캉의 환상적 주체와 팔루스.” 『철학논총』 제75집 제1권 (2014).

김동건·이문숙·이종길. “치료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대인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The 1999 Seoul International Sport Science Congress, 1999), pp. 1027-1034.

김동엽. “사드 한반도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과 한반도 미래.” 『국제정치논총』 제57권 제2호 (2017).

김동하. “인정의 비대칭적 구조와 공동체성 그리고 종교: 헤겔 통합이념을 통한 인정이론의 재구성.” 『정치사상연구』 제15권 제1호 (2009).

김홍규. “제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와 진화하는 미·중관계: 한국에 대한 함의와 더불어.”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217호 (2012).

_____. “4차 북한 핵실험과 사드의 국제정치.” 『통일정책연구』 제25권 제1호 (2016).

문장수. “인간범주에 대한 라캉의 구조적 정의에 대한 비판.” 『철학논총』 제71집 (2013).

문장수·심재호. “강박증에 대한 프로이트적 정의와 원인에 대한 비판적 분석.” 『철학논총』 제82권 (2015).

박광득. “제2장 사드배치 문제와 중국에 대한 외교전략 연구.” 『통일전략』 제16권 제4호 (2016).

박근재.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 『전략연구』 제23권 제1호 (2016).

박휘락.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의 루머와 확증편향.” 『전략연구』 제23권 제1호 (2016).

_____.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 『국제관계연구』 제21권 제1호 (2016).

변창구. “제5장.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 전략과 사드(THAAD).” 『통일전략』 제16권 제4호 (2016).

서재정 “사드와 한반도 군비경쟁의 질적 전환.” 『창작과비평』 제43권 제2호 (2015).

손기영.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본 동북아 국제관계와 규범공동체의 형성.” 『국제정치논총』 제55집 4호 (2015).

오상우·리광철·백영석·박민철,·정일관. “정신분열증 환자의 인지 결함.”『한국심리학회지』 제21권 제2호 (2002).

오승희. “전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일국교정상화: 하나의 중국론에 대한 인정론적 접근,”『한국정치학회보』 제51권 제1호 (2017).

은용수. “심리/인지적 연구와 국제관계학.”『국제정치논총』 제53권 제4호 (2013).

이기완. “사드와 AIIB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한국.”『국제정치연구』 제18권 제1호 (2015).

정문영.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의 개인 주체의 위상.”『비평과이론』 제2권 (1997).

홍주현·손영준. “사드 루머(THAAD rumor) 보도에 나타난 한국 언론의 정파성.”『한국언론정보학보』 제84권 (2017).

홍준기. “헤겔의 주인-노예 변증법과 라깡: 강박증 임상.”『라깡과 현대정신분석』 제9권 제2호 (2007).

Baylis, John, and Steve Smith.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Berthold-Bond, Daniel. *Hegel's Theory of Madness*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Campbell, David. *Writing Security: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2).

Dolan, Frederick M. “Political Action and the Unconscious: Arendt and Lacan on Decentering the Subject.” *Political Theory*, Vol. 23, No. 2 (1995).

Elleman, Michael, and Michael J. Zagurek. “THAAD: What It Can and Can't Do.” *38 North*, March 10, 2016.

Frantz Fanon. *Black Skin, White Masks* (New York: Grove Press, 1967).

Gallop, Jane. “Lacan's ‘Mirror Stage’: Where to Begin.” *SubStance*, Vol. 11/12, Vol. 11, No. 4-Vol. 12, No. 1, Issue 37-38 (1982/1983).

Hegel, Georg, and Wilhelm Friedrich. *Elements of the Philosophy of Right*. Translated by H.B. Nisbe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Hill, Christopher C. *The Changing Politics of Foreign Polic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Holsti, Ole R. “Cognitive Dynamics and Images of the Enem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1, No. 1 (1967).

Honneth, Axel.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 (Cambridge, Mass.: MIT Press, 1996).

Jameson, Fredric. “Imaginary and Symbolic in Lacan: Marxism, Psychoanalytic Criticism, and the Problem of the Subject.” *Yale French Studies*, No. 55/56 (1977).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_____. "War and Misperceptio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 18, No. 4 (1988).

Lacan, Jacques. *Écrits: A Selection* (Routledge: London, 2001).

Lebow, Richard Ned. *A Cultural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Lindemann, Thomas, and Erik Ringmar.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Recognition* (London: Routledge, 2014).

Naficy, Hamid. "Self-Othering: A Postcolonial Discourse on Cinematic First Contacts." In Fawzia Afzal-Khan, Kalpana Seshadri-Crooks (eds.). *The Pre-occupation of Postcolonial Studies*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0).

Schweller, Randall L.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1 (1994).

Shambaugh, David. *China Goes Global: The Partial Pow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Smith, Steve, Ken Booth, and Marysia Zalewski (eds.). *International Theory: Positivism and Beyo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Solomon, Ty. *The Politics of Subjectivity in American Foreign Policy Discours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15).

Taylor, Charles.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A. Gutmann (ed.).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Wendt, Alexander. "Why a World State is Inevitabl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9, No. 4 (2003).

_____. "The State as Person in International Theor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0, No. 2 (2004).

Williams, Robert. *Recognition: Fichte and Hegel on the Other*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92).

_____. *Hegel's Ethics of Recogni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Zevnik, Andreja. *Lacan, Deleuze and World Politics: Rethinking the Ontology of the Political Subject* (Abing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6).

〈신문〉

『동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크리스천투데이』.
『한겨레』.
『한국일보』.
『人民日报』.
China Daily.
The Diplomat.

〈인터넷 자료〉

https://plato.stanford.edu/entries/recognition/ (검색일: 2017년 9월 25일).
http://www.usfk.mil/Media/Press-Releases/Article/1301280/thaad-fact-sheet/ (검색일: 2017년 9월 30일).

[ABSTRACT]

Recognition and Misrecognition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d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between Korea and China

Key-young Son |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The mainstream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realism and liberalism, treat states as legal and rational actors endowed with sovereignty. Drawing on psychological and cognitive approaches, this article classifies states as actors of incomplete subjectivity requiring mutual recognition and carriers of desires struggling for the alleviation of the lack. This article introduces the theory of recognition established by Hegel and Honneth to analyze the tension and fric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engaging in a struggle for recognition over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d uses the Lacanian psychoanalytical concept of misrecognition to illustrate the patterns of behavior of states exhibiting pathological symptoms rising from unfulfilled desires. Defining the THAAD deployment as an act of infringing on its national interests and the strategic balance of Northeast Asia, China has taken economic sanctions detrimental to its own interests and demolished the foundation for its relations with South Korea. Insisting that the THAAD deployment is an inevitable step to count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South Korea, immersed in deep bewilderment, has considered a number of countermeasure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bringing the case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South Korea and China need to perceive their misrecognized subjectivity and pathological incompetence

and recognize the logic of each other's security through various channels of dialogue.

Keyword: struggle for recognition, misrecognition, THAAD, China, national identity

투고일: 2017년 10월 19일, 심사일: 2017년 11월 2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8일